

학부제를 다시 생각한다

신 양 균

전북대 법학과 교수



1. 학부제 현황

1) 계열형 학부제의 보편화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학부제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대학개혁의 큰 틀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만큼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18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국·공립 21개교, 사립대 73개교 등 94개 대학에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부제 시행 실태를 보면,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의 학부제를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계열형 학부제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학문적 성격이 유사한 학과들을 통합하여 학부로

하거나 종래의 단과대학을 학부로 변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학과통합=학부제'라는 도입 초기의 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제 실시 이후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이제 전공을 선택할 시점이 되면서 학부제 실시에 따른 장·단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2년 전에 기고했던 글("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1996년 1/2월호)에서 우려했던 학부제의 문제점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 실적 위주의 학부제 도입

현재의 학부제는 대학평가와 맞물려 진행되어 학부제 도입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줌으로써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부제

를 도입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다양한 학부제의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거의 획일적인 형태로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어떤 학과를 신설할 것인가가 대학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학부 내에 어떤 전공분야를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학부제에 대해서는 복수전공제를 통하여 폭넓은 전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연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 교육 및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수강인원의 조정과 다양한 학습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학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자율의 폭을 고정시킨 채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채찍질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단위대학이 학부제를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특성화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 개의 학과를 통합하여 학부제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특성화 대상에서 탈락하자 계획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라든가, 심지어는 교수들의 소속까지 다른 단과대학의 학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리는 웃지 못할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각 단위대학의 학부제 도입 실적을 계량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십억 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단위대학에 배분하면, 각 대학은 그 예산을 대학의 외형 키우기에 상당 부분을 지

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학부제 실시의 한 단면이다.

2. 학부제 실시의 문제점

1) 대학모형과 학부제

교육부는 단위대학에 대해 대학모형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단위대학이 연구중심대학·교양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관리중심대학과 같은 대학모형 가운데 하나(또는 둘 이상)를 선택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와 같은 장기적인 전망 없는 교세확장주의나 잠화점식 대학경영을 지양하고 단위대학별로 적합한 대학발전계획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라면 대학원의 개편 내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학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대학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연구여건이 비교적 좋은 단위대학들 가운데에도 대학원대학으로 바꾸기보다는 학부를 여전히 유지하여 교세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그 동안 학문 연구·교양 습득·산업인력 양성·관리자 배출이라는 다양한 과제를 함께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잠화점식 대학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단위대학들이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이러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학부제가 그 동안 학과 통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학과통합이 단위대학의 기능 분화라는 보다 큰 명제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출발한 몇 개의 단위대학들이 그 동안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면서 다른 대학과 거의 유사한 학과를 대거 신설하였지만, 그동안 다른 대학에 비하여 신설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 최근의 학부제 논의과정에서 외국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폐지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모형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다면 학부제가 대학개편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어떠한 대학모형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사과정의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이 장차 고유한 대학모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모든 대학이 학사과정을 학부제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학부제는 학생들이 학사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다양한 대학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과 형태가 바람직한 경우나 교양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학의 현실과 학부제

세계화가 국가부도의 위기로 마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제도 우리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학부제는 학문분야를 경쟁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학부제의 실시 이후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공은 학문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결과 현실수요가 적은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는 대학공간에서 도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점은 학부제를 대폭 도입한 대학

이나 사학의 경우에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분절현상이 심한 우리의 현실에서, 취업이 어려운 전공분야에 대해서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요구하는 학부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학부제가 학문의 수월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제는 동일 학부 내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최소전공이수 학점제도를 두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1/2 내지 1/3 정도의 학점만 이수하면 당해 전공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이 취업과 연결되는 현실에서 복수전공이란 학생들이 기피하거나 인기전공과 비인기전공의 구색 맞추기로 전략하기 쉽고, 결국 과거에 비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성취도가 낮아지고 전공분야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셋째, 전공선택권의 보장 없는 학부제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전공분야를 접한 후 정작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려고 해도 대개 특정 전공분야에 희망자가 몰리는 현실에서는 전공분야가 성적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선택권의 보장 역시 현실적으로 학문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97년에 덕성여대가 학부제를 폐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학부제가 생활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기능인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지식국가의 터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

활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복수전공제도로 인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경쟁의식이나 학점 위주의 대학교육을 초래하고, 교수들도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만 매달리게 되는 결과, 대학 자체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개혁이 대학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3. 대학개혁과 학부제

개혁이 장기적인 전망 없이 역사적 당위성에만 근거하여 급속히 추진되면서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날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릇된 관행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경우에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타율에 젖은 대학이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운 정책당국의 당근과 채찍만으로 쉽게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이 자기반성에 나서고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부제 역시 대학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은 학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개방적 논의와 대학구성원의 진지한 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학부제를 매개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은 학부제가 우리의 조직체제로 정착되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회구조를 가진 선진외국에서 실시되었던 학부제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학부제라는 제도보다 대학개혁이라는 상위명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편,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청은 대학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지역별 인재양성과 연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대학모형이나 학부제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

신양균/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육사 법학과 교관, 서강대 법학과 교류교수,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교육법개정특위 위원,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신고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등이 있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교수협의회 의 현황과 과제"(대학자주화백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